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의 학부 구성 및 사서 자격 인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Qualification of the Librarians and Organization of Departments' Division with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nder the New Educational System

곽 동 철(Dong-Chul Kwack)*

목 차

- | | |
|---------------------------|-----------------------------|
| 1. 서론 | 4. 현행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2. 학부제 시행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 | 4. 1 문헌정보학전공을 포함한 학부 구성 |
| 3.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 교육 | 4. 2 전공 이수학점 및 교과목 명칭의 변경 |
| 3. 1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개편 | 4.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개정 |
| 3. 2 문헌정보학과의 소속대학 및 구성학부 | 4. 4 사서 및 사서교사 인력의 양산과 취업문제 |
| 3. 3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명칭 변경 | 5. 결론 및 제언 |
| 3. 4 문헌정보학 교육과 사서 자격 인정 | |
| 3. 5 문헌정보학 교육과 사서교사 자격 인정 | |

초 록

본 연구는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 교육과 관련하여 문헌정보학전공을 포함한 학부 구성, 전공 이수학점 및 교과목 명칭의 변경, 사서 및 사서교사의 자격 인정, 사서 및 사서교사 인력의 양산과 취업문제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ABSTRACTS

This study examines various educational problem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ith relation to the organization of departments' division, change of the curriculum, qualification of librarians, and so on under the new educational system in Korea. Based upon various analyses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derives some effective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청주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접수일자 1999년 11월 2일

1. 서론

오늘날 우리 나라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대학이 지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대학이 대학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3가지 측면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려면 대학은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와 관련된 진리탐구와 창조적 활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대학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한편으로는 정권의 안정적 유지나 인기에 영합하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들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대학교육정책들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이미 시행되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사라졌던 것들을 포함만 달리하고 있다. 이미 실패로 끝난 대부분의 대학교육정책들은 사전에 충분한 사전준비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시행을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 사회에서 대학의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축약하면 첫째 대학의 기능별 유형화이고, 둘째 학부제 실시 논의일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을 기능에 따라서 직업교육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대학원중심대학으로 나누고 있다. 이

러한 대학들 가운데 소위 학부중심대학에서는 학과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학원중심대학에서는 특히 학부제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시행령은 재정지원을 무기로 전면적인 학부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각 대학들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부제를 시행한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 다소 늦은 대부분의 대학들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조만간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도입 초기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구성원들마다 조금씩 관점은 다르지만 여전히 팽배한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학부제가 대학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72년에 근대화와 산업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이 학부제라고 주창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수용한 '고등교육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안(일명 실험대학안)'에 따라 1973년부터 1980년까지 당시 학생정원 1,000명 이상인 대학들 가운데 43개 대학들이 학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학부제 시행정책은 1982년부터 대학별로 폐지하기 시작해 1985년에 이르러서 완전히 폐지되고, 그 대신 학과별 학생모집 및 학과별 교육과정 운영이 다시 부활되었다. 그렇다고 후자의 교육과정이 학부제 보다 좋은 제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양자의 교육정책은 서로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실패는 그 원인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겠으나 몇 가지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의 행정

적·재정적 지원 부재 및 학교 경영자들의 투자 부재로 말미암아 학부제 정착을 위한 제반 준비가 미흡하였다. 둘째, 일부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학생운동을 말살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전공학과에 대한 소속감 결여로 인해 학습능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강의의 부실화가 초래되었고, 교과목이 다양해지기능커녕 학과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보다 오히려 축소되었으며, 강좌당 학생수도 교과목에 따라 대폭 늘어남으로써 더 이상 학부제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학교육의 질이 낮아졌다.

그 이후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졸업정원제 등과 같은 대학교육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제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학부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논의에서는 제외하고 학부제에 국한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부제와 관련하여 다시금 대학사회에 소용돌이를 일으킨 것은 김영삼 대통령 시기라고 하겠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 21세기의 승리자가 되려면 사과의 혁신적 전환을 통해 “정보화 및 세계화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원리가 나와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제시된 것이 다름 아닌 근대화와 산업화 시대 교육의 틀로 제시되었다가 실패로 끝난 학부제였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러한 학부제를 ‘대학종합평가’라는 책적과 ‘특별재정지원’이라는 당근으로 말미암아 대학의 구성원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학일수록 자의반 타의반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처하였다.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들어오면서 국가 전체의 구조조정과 함께 오히려 학부제의 추진을 훨씬 강화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2 건국’에 ‘제2의 교육입국’ 정신으로 앞장설 때임을 강조하며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교육부 1999a, 9, 40). 그 가운데 학부제를 유도하는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확대 및 최소 전공 인정 학점제 도입’을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계속 포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차원에서 이미 학부제를 추진하면서 노정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고 나아가 정부와 대학의 구성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국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실험실의 모르모트와 같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실험대상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학부제 시행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헌정보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전국 32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학부제 추진으로 인해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서의 자격 및 사서교사 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

항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모집단위의 광역화'가 엄밀한 의미에서 '학부제'라고는 할 수 없으나 실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학부제는 학문적 토대나 기반이 유사한 학과를 통합하는 것으로서 원래 학과로 있어야 할 것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경우 하나의 학부로 크게 묶어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학부제'와 이 용어보다 넓은 의미인 '모집단위의 광역화'에 대해 큰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학부제 시행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

교육부는 1996년부터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학부제의 시행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여 선정된 우수대학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 재정을 차등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는 IMF라는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대학 스스로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취지로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현 정부의 중점시책으로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유도 지표를 반영한 공통 심사분야 3개 영역 및 각 대학별 1개 분야씩 응모할 대학개혁 과제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1999b, 3-4, 1998a, 2, 1998b, 3-5).

1999년도 교육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통 심사분야는 (1)대학 구조 조정(총체적 질 관리 체제), (2)교원

인사제도 운영의 합리성(우수교원 확보와 연구 / 교수능력 제고), (3)대학의 정보화(학술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정보기반 구축)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개혁 과제는 (1)학생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개편, (2)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 등), (3)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 선발, (4)대학별 자체 교육개혁 실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후자의 대학개혁 과제 가운데 4번째 영역은 대학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998년에 신설한 분야이다.

어느 대학이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공통 심사분야의 3개 영역과 함께 대학개혁 과제 4개 영역 가운데 1개 영역을 선정하여 각 항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개혁 과제로서 학부제로 지칭되고 있는 1번째 영역(〈표 1〉 참조)을 선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개혁 과제의 1번째 영역이 공통 심사분야와 부분적으로 중복되며, 가장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아이디어만 출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 나머지 영역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선정되기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각 대학들마다 2번째 영역의 경우에는 대학의 산하기구로 사회교육원을 설치하고 있지 않거나 실적이 없으면 작성하기 어려우며, 3번째 영역의 경우에는 입시부정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4번째의 경우에는 대학 구성원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예산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정을 꺼리고 있다.

교육부는 이렇게 작성된 각 대학들의 교육 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서를 제출 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등을 거쳐서 최종 지원대학을 결정하고 있다. 영역별 배점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3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공통 심사분야에 30점, 대학별 1개 분야씩 응모하는 대학개혁 과제에 70점을 부여하

고 있다. 여기서 공통 심사분야는 대학 구조조정(12점), 교원인사제도 운영의 합리성(13점), 대학의 정보화(5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학부제와 관련된 '학생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개편' 영역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모집단위의 광역화(8점), 학생의 전공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25점), 학생 전공의 실질적 보장(30점),

<표 1>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일반대학) 개편

1. 모집단위의 광역화(8점)

• 모집단위 광역화의 정도

- 대학 전체 모집, 대계열 또는 단과대 모집, 소계열 또는 학부로 모집, 학과군으로 모집 정도

2. 학생의 전공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25점)

• 학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 모집단위내 교육과정 개발 여부
- 최소 전공이수 학점제 도입
- 신규 강좌 개발 노력

3. 학생 전공의 실질적 보장(30점)

• 전공 운영의 다양화

- 복수전공, 연계전공 등 다양한 전공과정 개발
- 전체 재학생 대비 복수전공/연계전공/복합(통합)전공 학생비율 모집단위로 입학후 전공운영현황
- 학생들의 전공배정의 합리성

• 모집단위를 넘어서는 전공허용 여부

- 단과대를 넘어서는 전공허용실적(전과실적 등)

• 학생지도를 위한 합리적 방안 강구 여부

- 담임 또는 지도교수제, 교수방법 개발, 학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개발 등

4. 전공선택권 보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 노력(7점)

• 기초학문에 대한 대책

- 교수지원 프로그램,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 교육의 질에 대한 대책

- 교수 충원, TA(수업조교) 확보, 실험·실습실 확보 등

※ 대학의 설립목적, 지역사회의 수요, 학문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항목에 각 대학의 특성을 자체 제안과제로서 사례별로 기술하면 그 특성을 인정

전공선택권 보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 노력(7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은 형식적으로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위해 소위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대학들마다 서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대학들이 시행과 폐지를 거듭하였던 학부제를 또 다시 시행 한지도 벌써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 교육부는 대략 5가지 사유를 들어 전국의 대학들이 학부제를 도입하도록 주창하여 왔다(한국일보, 1998). 첫째, 우리 나라 대학의 학과는 지나치게 세분화해 있는 데다 웬만해서는 전공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닫힌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전공이나 소질보다는 시험성적에 의해 학과를 선택한 상당수 학생들이 최초로 결정한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과 또는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 셋째,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크게 흥미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과목들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넷째, 향후 다가올 정보사회는 지식의 생성 및 소멸주기가 짧아지고 평생학습이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사회이다. 다섯째, 미래사회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범용할 수 있는 학습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학부제 실시의 취지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기능하던 전공과 이 전공을 시행하는 조직단위인 학과가 여타의 전공과 상호 공조하여 급변하는 현대사회가 새로이 요구하는 새로운 전공을 창출할 수 있는 학문적 탄

력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가능한 한 신장하고자 하는데 있다면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할 긍정적인 정책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학부제 추진이 제도상으로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각각의 대학들마다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교육부가 추구하는 모형에 맞추어 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소속대학간, 구성학부간, 학과간 경쟁체제 유발 및 구직난 등과 겹쳐 전공선택의 편중화와 국가고시 과목의 초만원 수강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1998). 둘째, 교과목 구성상 전공필수나 교양필수와 같은 필수과목이 없어지고 모두 선택과목으로 개편되면서 기초학문의 붕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학문의 성격 등과 같은 일정한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2개 이상의 학과들이 인위적으로 하나의 학부를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넷째, 학생들의 전공이 확정되지 않아 재학중 또는 졸업후 학습지도와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섯째, 전공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수업의 실시가 힘들며, 또한 학생들에게 전공을 배정하는데 따른 교수충원, 실습기자재 확보, 강의실 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학생들의 전공 심화를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해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기간의 연장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3.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 교육

3. 1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개편

지금의 학부제가 문제점을 보완해 가며 계속 추진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교육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슬며시 사라져 버릴 것인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술하여 나가고자 한다. 소위 학부제와 다전공제로 지칭되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개혁 과제 가운데 <표 1>의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개편' 영역은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 15,665호로 공포된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전년도에 이어 계속 현재에도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받고 있다. 그 주요 내용들은 크게 (1)모집단위의 광역화, (2)복수전공, 연계전공 등 다양한 전공과정 개발, (3)최소전공 인정 학점제로 대별할 수 있다(교육부 제도개선과장, 1998).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에서 '학과 또는 학부'로 변경하고, 교수와 학생의 소속을 분리하고 있다.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하여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개발하여 이를 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생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지 않고 광역화된 모집단위에 입학하여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고 폭넓은 학습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정원도 모집 단위별로 학칙에 정하고 신입생

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은 희망에 따라 한 개의 전공을 집중하여 이수할 수도 있으나, 가능한 학칙이 정하는 범주에서 2개 이상의 전공(double major),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design)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교육과정의 전면개편을 위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전공 이수가 가능하도록 최소전공 인정 학점제를 학칙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문 분야에 따라 2개 전공을 이수할 경우에 총이수학점의 1/4(30~36학점), 3개 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1/6(20~24학점) 정도의 최소 전공학점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가 추진하는 모집단위의 광역화는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 학생모집을 가능한 넓게 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실제로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권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도 대학정원을 모집단위로 표시하고, 모집단위도 2개 학과 이상 또는 학부로 광역화하는 것을 학사개혁의 골자로 담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학부제나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전공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작으로 보고, 나아가 각 대학이 학생들의 전공인정 학점을 최소화하여 학칙에 반영함으로써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 등의 실시를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 전국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정책은 문헌정보학 교

육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99년 10월 현재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문헌정보교육과)가 설립되어 있는 전국의 4년제 대학 32개교 가운데 모집단위의 광역화로 대변되는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다음의 <표 2>에서와 같이 75%에 해당하는 24개교에 이르고 있고 아직 8개교는 단독학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1997년까지 학부제를 실시한 대학이 불과 6개교에 지나지 않던 것과 비교하면 숫자상으로 놀라운 증가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부 교육과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 교육도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강화된 정부의 계속되는 학부제 및 다전공 시행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우선,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상기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학부를 구성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학과들과 하나의 학부를 구성해야 하는가? 또한 학부명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학교마다 커다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각 대학별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최소전공 인정 학점제를 학칙에 반영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도 2개 전공을 이수할 경우에 30~36학점, 3개 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20~24학점 정도의 최소 전공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전체 개설과목 수, 전공필수과목 수의 제한 및 폐지, 유사과목의 통·폐합, 교과목의 명칭 변경, 사서실습(도서관실무실습 등과 같은 실습과목)과목의 존폐여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현재 2급 정사서의 자격 인정은 법적으로 대학에 설치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되고, 사서교사의 자격 인정은 학과별 최소전공 인정 학점수에 관계없이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부제 실시 이전의 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은 대학이나 학생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교양과목 등을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전공과목을 60~70학점 정도를 이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학점을 대학에서 이수한 학생이 2급 정사서 자격증을, 또한 그러한 학생들 가운데 교직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면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사서교사 자격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학부제 실시로 말미암아 전술한 바와 같이 전공 이수 학점 수가 대폭 하향 조정됨으로써 사서자격 인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2급 정사서 자격에 걸맞는 전공과목의 심화 정도에 대해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며, 아울러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졸업생도 일반적으로 60~70학점의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준사서 자격을 인정받는데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3. 2 문헌정보학과의 소속대학 및 구성학부

금년으로 4년째 접어든 '99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사업 시행계획에서 공통심사분야의 대학구조조정 영역에서 '유사학과 등 통·폐합' 항목은 유사학과, 연구소, 중복교과 등 통·폐합과 함께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항목은 각 대학별로 1개 분야씩 선택하는 4개

〈표 2〉 전국 문헌정보학과 의 소속대학 및 구성학부

1999년 10월 현재

대학명	소속대학	구성학부	학부 소속 전공명	비고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
건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군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러시아어문학, 문헌정보학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사학, 문헌정보학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사학, 철학, 한문학, 문헌정보학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사회학, 심리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광고홍보학, 문헌정보학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문헌정보학과	×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심리학, 사회학, 지역사회개발학, 산업복지학, 국제관계학, 부동산학, 언론매체학, 사회복지학, 문헌정보학	○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도서관학	○
대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계열	국어국문학, 사학, 철학, 영어영문학, 문헌정보학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사회학, 사회사업학, 심리학, 아동가족학, 정치학, 문헌정보학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인문과학부	사학, 철학, 국민윤리, 문헌정보학	○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인문계열	아랍어과, 사학, 문헌정보학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사학, 지리학, 문헌정보학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보영상학부	언론영상학, 문헌정보학	○
성균관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사학, 철학, 문헌정보학	○
숙명여자대학교	이과대학	정보과학부	컴퓨터과학, 멀티미디어, 문헌정보학	○
신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정보관리학과군	지역정보학, 문헌정보학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 중어중문, 영어영문, 사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문헌정보학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문헌정보학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과학부	경제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국제관계학, 문헌정보학	○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학부	신학, 지역개발, 국어국문, 영어영문, 유아교육, 문헌정보학	○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사회계열	심리학, 문헌정보학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철학, 사학, 문헌정보학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계열	신문방송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문헌정보학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문헌정보학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인문계열	사학, 문헌정보학	○

분야 가운데 첫 번째 분야인 '학생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개편'과 일치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자 대학 구성원간 합의 도출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모집단위를 광역화하며, 최소전공 인정 학점제를 실시하고,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등과 같은 다전공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학사개편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에서도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소속대학의 방침에 따라 소위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1999년 10월 현재 전국 문헌정보학과 32개교 가운데 24개교에서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각 대학별 문헌정보학과 소속대학 및 구성학부는 다음의 <표 2>와 같으며, 비교란에 'O' 표한 대학들은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비교란에 'X' 표한 대학들은 현재 학부제를 실시하지 않고 학과제를 유지하는 대학이다. 이처럼 학과제를 유지하고 있는 8개 대학은 강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강남대학교와 동덕여자대학교는 2000년부터 학부제를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사서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학과제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현재 학부제를 실시하는 문헌정보학과 32개교의 그 대학내 소속대학을 살펴보면 크게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인문사회과학계열, 기타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 인문과학계열에는 문과대학 4개교, 인문대학 7개교, 인

문과학대학 3개교로서 총 14개교가 포함되어 있고, 사회과학계열에는 사회과학대학에 12개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문사회과학계열에는 인문사회과학대학 3개교, 인문사회대학 1개교 총 4개교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계열로는 이과대학에 1개교, 사범대학에 1개교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헌정보학과의 소속대학 비율은 우리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문헌정보학의 속성이 인문과학적이며 사회과학적인 학제적 속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과 24개교의 소속대학내 구성학부 명칭도 소속대학과 마찬가지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문과학계열의 학부명으로 인문학부 6개교, 인문과학군 1개교, 인문과학계열 1개교, 인문과학부 1개교, 인문계열 2개교로서 총 11개교가 포함되어 있고, 사회과학계열의 학부명으로 사회과학부 7개교, 사회계열 2개교로 총 9개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문사회과학계열의 학부명으로 인문사회학부 1개교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 계열의 학부명으로 정보영상학부 1개교, 정보관리학과군 1개교, 정보과학부 1개교가 포함되어 있다.

3. 3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명칭 변경

문헌정보학의 교과목 명칭은 대학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부제 시행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학부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전공교과목의 개설 학점 수를 축소하고 이와 함께 전공필수과목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나머

지 교과목을 전공선택과목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학생들도 학과제에 비해 소속감 등의 결여로 전공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다른 학과들과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과에서도 교과목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하겠다. 이를테면, 어떠한 교과목을 개설해야 학과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교과목의 명칭을 변경해야 기존의 교과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어떠한 명칭의 교과목을 개설해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영역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을 찾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교과목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교수주소록에 소개되고 있는 '98년도와 '99년도 교과목 명칭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 자료에 나타난 교과목 명칭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된 것은 해당 대학의 교과목을 직접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또 다른 기회에 수행하기로 남겨 두고 다음과 같이 개략적인 동향만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에 따라서 전공별 개설 학점수에 맞춰 기존의 교과목들 가운데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이나 학부 내 타전공과 중복 등으로 설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교과목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정보처리특강', '멀티미디어론', '영남학자료', '연구와 문헌조사' 등과 같은 교과목들이 있다.

둘째, 개설 교과목의 축소에 따라 2개 이상

의 교과목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그 경우로는 '인문과학서지'와 '사회과학서지'라는 교과목이 '인문사회과학정보론'으로, '고전자료론'과 '고전자료조직론'이 '고문헌의 조직과 활용' 등으로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이 수강하기에 보다 수월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교과목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 교과목 명칭의 뒷부분이 '원론'이나 '개론'으로 끝나는 경우에 이를 '이해' 등으로 바꾸고 있다. 이를테면, '문헌정보학개론'은 '문헌정보학(의)이해'로, '정보학개론'은 '정보학(의)이해'나 '정보학(의)기초'로, '중국서지학'은 '동양문헌서지의 이해' 등으로 교과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

넷째, 교과목명으로 진부하게 여겨지는 용어를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즉, '도서관경영론'은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으로, '자료조직론'은 '정보조직론'으로, '도서관자동화'는 '전자도서관의 구축과 활용'으로, '서지학개론'은 '문헌커뮤니케이션과 서지학의 새로운 이해', '도서관사'는 '도서관문화사'나 '고인쇄출판문화사' 등으로 교과목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다섯째,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교과목 명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명칭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목들로는 '미디어자료제작론', '인터넷정보검색', '제3세계도서관방법론', '멀티미디어정보론', '책의 문화와 역사', '도서관홈페이지운영연습', '전자정보서비스론', '도서관조사통계론' 등을 예시할 수 있다.

3. 4 문헌정보학 교육과 사서 자격 인정

현행 관련 법규에 의하면 사서직원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5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등]과 이와 관련하여 그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별표3]에 의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자격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표 3>에서와 같이 다양한 교육과

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최소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서직원이 상위 자격(준사서 → 2급정사서 → 1급정사서 또는 2급정사서 → 1급정사서)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거의 교육기간에 비례하여 체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서직원의 자격별 자격요건은 지금까지 도서관계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유지되어

<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1급정사서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근무경력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 이를 이수한 자
2급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이외의 석사학위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사서	1.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출전> 한국도서관협회, 한국 도서관 법령집 (서울 : 동협회, 1998), p.186.

오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대학들이 학부제를 시행하면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이 도서관계의 서로 다른 집단간 이해 관계가 상충되면서 하나의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계 분위기와 함께 도서관에 근무중인 행정직, 전산직 등과 같은 여타 직종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이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도서관계의 사서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자격의 인정을 위해 국가고시와 같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는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도서관계 단체나 인사에 따라 각각 학력이나 전공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격시험을 실시하거나(도서관운동연구회,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과교육협의회 등) 또는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일종의 절충식 국가자격 인증시험을 실시하자는(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등) 주장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해 문헌정보학 전공의 존재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반대 또는 유보하자는 의견(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등)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다.

둘째,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졸업생과 학부제하의 4년제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서자격 인정 문제에 있어서 전공학점의 이수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으로

졸업하는 학생이 2개 전공을 이수할 경우에 30~36학점씩, 3개 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20~24학점 정도씩의 전공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학생은 졸업을 위해 60~70학점 정도의 전공학점을 취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과교육협의회에서는 전국의 8개 전문대학 문헌정보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수 학점 수에 따라 2급 정사서 자격을 부여하고자 주장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4년제 대학들도 이수학점 수는 조금씩 달리하지만 학부제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 학생들의 전공심화를 위해 전공학점을 45학점(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설문지 일부 응답자), 50학점(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등), 54학점(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97 정기총회 결의사항), 57학점(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등), 60학점(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과교육협의회 등) 이상 이수한 자에게 2급 정사서 자격을, 그 미만 이수자에게는 준사서 자격을 부여하고자 주장하고 있다.

셋째, 사서의 자격 구분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서의 자격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준사서,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로 구분하고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서자격의 구분을 통합하여 '문헌정보사'로 개칭하자는 의견(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을 개진하고 있으며, 또 다른 단체에서는 준사서, 정사서, 연구사서로 구분하자는 의견(도서관운동연구회)을 내놓고 있다.

넷째, 사서자격의 최소학력 기준을 대학 졸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

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문서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서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회의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사서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나아가 타 분야의 전문적처럼 그 위상을 높여보고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사서자격의 최소학력 기준을 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3. 5 문헌정보학 교육과 사서교사 자격 인정

전국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로 말미암아 사서자격 인정 문제와 함께 사서교사의 자격 인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교육법 제79조 제1항에서 교사는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1급, 2급)로 나누고 있으며, 동법의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서교사는 ①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②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자, ③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서교사의 검정기관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상기 ①, ③항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②항의 경우에는 '교육감'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서교사의 자격은 위에서 기술한 몇 가지

방안을 통해 취득할 수 있지만,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해 부여되는 사서교사의 자격 인정 문제를 학부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각 대학의 교직과정은 사범계대학 또는 대학의 교육과에서 양성되지 않는 과목 및 부족교원의 충원을 위한 교원양성 과정이다. 교육부는 1984년부터 가급적 교직과정의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있다. 특히 사범계대학 등에서 양성되는 과목, 이를테면 중·고교 공통필수 또는 과정보별 필수과목에 대한 교직과정 설치승인 신청을 지양하고 있다.

현재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해당학과의 당해 학과 졸업정원의 30% 이내(단, 문헌정보학과는 50% 이내) 범위에서 제2학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이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등에 의해 당해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검정 합계 기준은 평균성적이 100점으로 환산하여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공과목 가운데 표시과목에 관련된 기본이수 영역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기본이수 영역의 과목이 3과목 미만 개설학과도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 영역은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해당대학에서 문헌정보학전공 영역의 교육과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1997, 19). 또한 교직과목의 이수학점도 양호교사와 마찬가지로 16학점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대

학에서는 2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1997, 36).

이처럼 학부제 하에서 사서교사 자격 인정 문제는 사서교사의 양성과 관련하여 그 자격 기준 가운데 ②항을 삭제한다면 사서 자격 인정 문제와는 달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서 자격의 인정은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서교사 자격의 인정은 해당 학과를 졸업한 자가 아닌 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학과 통합이나 학부제 운영의 경우를 대비하여 교직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다(교육부 1997, 34).

4. 현행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국 32개 대학에서 시행중인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문헌정보학전공을 포함한 학부의 구성, (2)교과과정의 개편에 따른 전공 이수학점 및 교과목 명칭의 변경, (3)사서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4)숫적으로 늘어나는 사서직 및 사서교사 인력의 양성과 취업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 1 문헌정보학전공을 포함한 학부구성

학부제의 실시와 함께 소위 인기있는 전공은 학생들이 넘치고, 그렇지 못한 전공은 학생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될 경우에 학문 발전의 심각한 불균형이 충분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전술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점점 크게 대두될 것이다. 과연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대학교육에 시장경제논리를 접목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대학의 주변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었는가?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문헌정보학 관련 인사들은 학부제의 시행과 더불어 과연 문헌정보학은 계속 살아 남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한번쯤은 던져 보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는 각 대학들마다 사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문헌정보학 관련 인사들은 어떠한 학과들과 함께 하나의 학부를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금년부터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1999년 말경에 전공별로 학생들을 배정하게 되면 이러한 고민은 훨씬 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학부구성의 어려움과 고민은 1996년부터 학부제로 학생을 모집해오고 있는 대학들이 처음에 구성한 학부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소속전공을 달리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세대학교는 대학원중심대학, 즉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1996년에 문과대학 소속의 전체 11개 학과를 인문학부로 개편하여 학생을 모집하였다(한상완 1996, 19-33). 그 이후 인문학부 내에서 전공별로 학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차기 년도부터 인문학부 소속의 3개 전공(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노어노문학)이 유럽어문학부로 별도의 학부를 구성하였다. 현재 인문학부는 유럽어문학부 소속의 3개 전공을 제외한 8개 전공(국어국문학, 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문헌정보학)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학전공 및 심리학전공의 경우에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에서 각각 50%씩 충원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1996년에 사회과학대학 소속의 6개 전공(정치외교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문헌정보학)을 함께 사회과학부로 구성하였다(최석두 1996, 34-40). 이화여자대학교도 학부제를 시행한 첫 해부터 전공별로 학생을 배정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에 처해 여러 차례 논란을 거친 후에 현재 사회과학부는 4개 전공(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문헌정보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신문방송학전공은 언론홍보영상학부로 독립하였고, 정치외교학전공과 행정학전공은 경제학전공과 함께 정경학부를 구성하였으며, 심리학전공은 사범대학 교육심리학과가 사회과학부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전공명을 개명하였다.

성균관대학교는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와는 달리 학부를 구성하는 초기 단계에

서는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겪었으나 처음에 구성된 학부를 소속 전공의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학부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학 자체의 학과통합연구위원회가 마련한 학과별 편제시안에 의하면 문헌정보학과는 원래 인문대학에 소속해 있었으나 소속 단과대학을 바꾸어 사회과학대학 정보과학부(신문방송학, 통계학, 문헌정보학)로 편제하였었다. 이에 대해 해당되는 모든 학과들은 반대의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문헌정보학과에서는 특정 학부에 소속하지 않고 독립 학부 또는 학부로 편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학교당국에 제출하였다. 대학당국에서는 해당학과의 견해를 참조하여 인문대학을 인문학부(한국철학, 동양철학, 서양철학, 사학, 문헌정보학), 동양어문학부(국어국문학, 한문학, 중어중문학), 서양어문학부(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 노어노문학)로 편제시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편제시안을 기반으로 대학당국에서는 유학대학 동양학부(유학, 한국철학, 중국철학)와 인문대학 인문학부(철학, 사학, 문헌정보학) 및 어문학부(동양어문학부+서양어문학부)로 그 편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이은철 1996, 41-51). 그러나 차기 년도부터는 인문대학 전체를 하나의 학부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문헌정보학과가 어떠한 학부에 편제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문헌정보학을 초창기에 받아들인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가 모두 문과대학 또는 인문(과학)대학에 도서관

학과(이후에 문헌정보학과로 개명)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물론 학부제를 실시하기 직전에 또는 실시하면서 이화여자대학교는 문헌정보학과를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로, 숙명여자대학교는 이과대학 정보과학부로 소속대학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문헌정보학은 설립 배경으로 인해 인문과학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중시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문헌정보학의 성격이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관심영역의 확장으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및 정보기술 응용 등의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표 2>와 같이 전국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소속대학 및 구성학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대학들이 소속학부를 변경하는 과정을 통해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전공의 편제는 그 설립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문과대학이나 인문학부에 소속되거나, 또는 사회과학대학이나 사회학부에 소속되더라도 전자의 인문과학 계열의 학과들과 하나의 학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 않으면 문헌정보학과 자체적으로 독립학부로 편제되거나 학과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학부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는 <표 2>의 8개 대학들이 대부분 사회과학대학에 소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현재 인문대학 인문계열(사학, 문헌정보학)로 학부를 구성하고 있으나 차기 연도부터 문헌정보학과만의 독립학부로서 지식정보학

부(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4. 2 전공 이수학점 및 교과목 명칭의 변경

학부제 실시를 위한 학사제도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재학중 이수해야 할 전공학점 수가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 한 개의 전공을 집중하여 이수할 수도 있으나 가능한 학칙이 정하는 범주에서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전면개편을 위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전공 이수가 가능하도록 최소전공 인정 학점제를 학칙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결과 학문 분야에 따라 2개 전공을 이수할 경우에 총 이수학점의 1/4(30~36학점) 정도, 3개 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1/6(20~24학점) 정도의 최소 전공학점을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최소 졸업학점 수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금까지는 140학점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학부제의 실시와 함께 120~140학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학부제 하에서 전공 이수학점 수의 감소는 전공분야 개설과목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학과들과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과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어느 정도 학점의 전공교과목을 개설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명칭으로 전공교과목을 개설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느 누

구도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확실히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기마다 전공교과목의 개설 및 폐강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제를 시행하기 전까지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전공교과목을 연간 90학점 정도를 개설하고 학생들은 60~70학점 정도를 이수하고 졸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공교과목과 관련한 개설학점 수와 이수학점 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존 학사제도 내에서 학생들의 수강신청 경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최소 졸업학점 수인 140학점 범위에서 어느 정도 수월하게 부전공과목, 교직과목, 교양선택과목 등을 이수하고자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의 기준학점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범주에서 수강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대학의 교과과정 개편작업을 담당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 졸업학점 수를 140학점으로 유지하면서 2개의 전공을 이수한다고 가정하고 문헌정보학과의 대처방안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학부제 하에서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 수가 기존의 부전공 이수자 수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공교과목의 개설 학점 수를 기존의 90학점에서 60~72학점(총 이수학점의 1/4인 30~36학점의 2배수) 정도로 하향 조정하여 개설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전공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려는 학생을 보호하면서 아울러 개설 교과목의 폐강을 방지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복수전공으로 문헌정보학을 선정

할 학생 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5인 이상의 교수가 재직함으로써 기본적인 강의 시수(9시간)를 맞추기 어렵다고 여길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학 내에서 기본 강의 시수와 최소 교과목 설강 인원수를 조정하고, 이와 함께 개설 교과목의 수를 하향 조정하여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의 폭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과내용을 보장하여 동일 교과목의 분반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별로 나름대로의 보완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라 몇몇 대학들은 각 학기당 교수의 기본 강의 시수를 6시간으로 하향 조정하고, 최소한 학생 1명만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폐강할 수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 몇 가지 추가적인 보완책들이 마련된다면 학부제가 교수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학부제 시행에 따라 문헌정보학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공 교과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과연 어떻게 교과목 명칭을 변경하면 기존의 교과내용을 반영하면서 학생들을 수강으로 유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교과목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문헌정보학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또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에 명시된 다음의 <표 4>의 필수과목명을 정규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반영

〈표 4〉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자 격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1급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 제론, 비교저작권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선택
2급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저작권론(II), 자료조 직론(II),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 경영론(II),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II)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 교과과정 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 료조직론(I),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저작권 론(I), 도서관경영론(I), 독서지도론(I)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 교과과정 에서 선택

비고 : 필수과목중(I)의 내용은 기초과정, (II)의 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출전〉 한국도서관협회, 한국 도서관 법령집 (서울 : 동협회, 1998), p.190.

해야 할 것인지? 만약 반영한다면 그 과목명
 을 어떻게 변경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법규
 상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교육기관
 의 문제이니 무시해야 할 것인지? 하는 현실
 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문헌정보학계 전체의 관심사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각
 대학별로 교과과목명을 대학의 사정에 맞춰 3, 3
 과 같이 각각의 학과에서 나름대로 변경한다
 면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문헌정보학 교
 육과 사서자격 인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문헌정보학의 발전을 위해 학계와
 도서관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
 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개정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
 상으로 사서 자격증을 발급해 오고 있다. 그 동

안 학과체제로 유지되던 대학들이 학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한국도서관협회는 이러한 사
 서 자격증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를 개정
 해야 하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사서직원의 자
 격요건이 3,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너무 다
 양하게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이해관계자 또
 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1999년 5월중에 전
 국 각 대학 및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및 도
 서관학과(40개처),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 및
 전문단체(9개처),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협의회(10개처)를 대상으로 사서자격증 관련
 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를 기초로 하여 한국도서관협회에 '사서자격
 증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 작성 특별위원회
 (이하에서는 특별위원회로 기술함)'를 설치하
 고 도서관 관련 단체(15개처)에 위원 위촉을
 의뢰하여 13개 단체(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
 의회,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과교육협
 의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
 회, 서지학회, 도서관운동연구회, 전국사서
 협회, 공공도서관 협의회, 국공립대학도
 서관협의회, 사립대학도

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협의회, 점자도서관협의회, 국립중앙도서관)로부터 피추천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사서자격증 관련 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고시제, 사서 자격 구분의 개선, 세부적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등의 문제는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발전위원회의 장기 연구과제로 이첩하기로 하였다. 이는 일찍 학부제를 실시한 대학의 재학생들이 2000년 2월에 사서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5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등]과 관련하여 그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별표3]을 개정하는 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동시행령 [별표3]의 2급 정사서 자격요건 제1항과 제6항에 대해 개정하기로 하고, 그 결정 내용을 한국도서관협회에 제출하여 법규 개정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항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서 자격 기준을 졸업기준에서 이수학점으로 조정하였다. 즉,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을 전공하여 5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는 2급 정사서, 50학점 미만을 이수한 자는 준사서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6항의 경우에는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서 전체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육기간이라는 면에서는 배치되지만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준사서의 도서관 근무 경력을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전면적인 법규의 개정 작업은 문헌정보학과와 도

서관계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서 및 사서교사 인력의 양성과 취업이라는 양면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4. 4 사서 및 사서교사 인력의 양산과 취업 문제

학부제 도입은 대학의 교육 및 학사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문헌정보학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복수전공의 이수를 통해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수전공 이수자들도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서관계의 저변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사제도의 변화는 사서직 인력의 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원의 졸업자들을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매년 배출되는 사서직 인력은 1,585여명의 2급 정사서, 820여명의 준사서(총 2,405여명)에 이를 정도로 양산되고 있다. 이는 다음의 <표 5>에서와 같이 사서직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및 부설기관이 최근 들어 현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970년도 후반부터 1980년도 초반에 전국적으로 25개 대학(현재 32개교에 설치)에 문헌정보학과가, 3개 전문대학(현재 8개교에 설치)에 문헌정보과가 집중적으로 창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비율은 대학의 경우에 78%, 전문대학의 경우도 37%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32개 대학 가운데 7개교가, 8개 전문대학 가운데 3개교가 야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5〉 전국 사서양성 기관 현황

1999년 10월 현재

대학(교)명	창설연도	모 집 정 원		대학원 설치연도		교육대학원 설치연도	사서교육원 설치연도	기타
		주간	야간	석사	박사			
강 남 대 학 교	1978	40	40					
건 국 대 학 교	1984	40						
경 기 대 학 교	1983	40		1999		1998		
경 북 대 학 교	1974	40		1978	1999			
경 성 대 학 교	1983	40						
계 명 대 학 교	1980	50	40	1989	1999	1998	1989	
공 주 대 학 교	1983	25				1987		
광 주 대 학 교	1984	40	60					
대 구 대 학 교	1982	40	40	1997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1976	40		1997				
대 진 대 학 교	1991	50	(40)			1997		(3,4학년)
덕 성 여 자 대 학 교	1980	60						
동 덕 여 자 대 학 교	1980	40	40	1996				
동 의 대 학 교	1982	40						
명 지 대 학 교	1980	30		1989		1994		
부 산 대 학 교	1984	40		1989	1993			
상 명 대 학 교	1980	40	40	1980	1993	1994		
서 울 여 자 대 학 교	1980	40		1988				
성 균 관 대 학 교	1964	40		1971	1974	1999	1965	
숙 명 여 자 대 학 교	1976	40		1983		1982		
신 라 대 학 교	1979	40				1998		
연 세 대 학 교	1957	40		1957	1980	1979 폐지		
이 화 여 자 대 학 교	1959	60		1959	1987	1999 폐지		
전 남 대 학 교	1980	30		1992	1998			
전 북 대 학 교	1980	40		1999				
전 주 대 학 교	1983	40		1994				
중 부 대 학 교	1994	40	(40)					(2,3,4학년)
중 앙 대 학 교	1963	30		1972	1983	1997		
청 주 대 학 교	1979	40		1984		1995		
충 남 대 학 교	1979	30		1991				
한 남 대 학 교	1981	40		1997				
한 성 대 학 교	1981	45	35	1998				
한 양 대 학 교						1980		
소 계		1,290	295					
계 명 문 화 대 학	1974	80	80					
대 립 대 학	1994	40	80					
동 부 산 대 학	1979	80						
동 원 대 학	1997	80						
부 산 여 자 대 학	1970	80						
승 의 여 자 대 학	1972	80	80					
인 천 전 문 대 학	1981	80						
창 원 전 문 대 학	1980	60						(산업체 20)
소 계		580	240					

더구나 문헌정보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32개 대학들 중에서 69%에 달하는 22개교에서 일반대학원과정(석사 및 박사과정)을 설치하고 있고, 교육대학원과정의 경우에도 34%에 이르는 11개교(학부과정이 없는 한양대학교를 포함하면 12개교)에서 설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성균관대학교와 계명대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단기교육과정의 사서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사서직 양성기관의 대폭적인 증설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에 의해 사서직 인력의 급증은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지금도 학생들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서 사서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늘어만 가고 있다. 더욱이 IMF라는 경제적 시련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그 비율이 극심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 관련 인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 수수방관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 관련 인사들이 합심하여 이러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극히 원론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 관련 인사들이 공동으로 사서직 인력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서직이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업무를 부단히 개발해야 하며,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신설을 요구하는 범시민운동을 기획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어느 한 개인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하나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주거지역 근처에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스스로의 권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몽하여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가 공동으로 미래의 사서직 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습 및 도서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현재 40여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사서직 인력의 양성을 위해 충분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단기교육과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서교육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이 단기적으로는 다른 대학에 비해 이로운 점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학에 커다란 피해를 주면서 그 스스로도 어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에 설치된 사서교육원 가운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기관은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설립 연역과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 우리나라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각급 도서관의 설립이 촉진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사서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단기교육과정을 통해 사서를 양성하기 위해 그 당시 문교부가 설립을 허가한 기관이 한국사서교육원인 것이다(<http://slisnet.skku.ac.kr/~edu/sub1-2.html> 및 <http://slisnet.skku.ac.kr/~edu/sub1-6.html>).

〈표 6〉 사서교육원 졸업생 통계표('65~'96)

과정 학년도	정사서		준사서	사서교사	문헌관리	계
	1급정사서	2급정사서				
1965		64	10			74
1966		22	10			32
1967		15	11			26
1968		9	13			22
1969		9	15			24
1970		10	20			30
1971		13	22			35
1972		28	27			55
1973		27	30			57
1974		27	46			73
1975		34	40			74
1976		46	56			102
1977		51	61	6	55	173
1978		93	139	8	58	298
1979		118	132	28	204	482
1980		151	218	60	185	614
1981		153	120	30	2	305
1982		53	157	30		240
1983		43	137	45		225
1984		66	138	72		276
1985		96	128	58		282
1986		112	112	68		292
1987		97	95	63		255
1988		115	95	60		270
1989				49		49
1990		70	149	31		250
1991	12	52	149			213
1992		41	105			146
1993	6	45	101	32		184
1994		44	141			185
1995		46	92			138
1996	9	43	84	20		156
계	27	1,793	2,653	660	504	5,637

그 동안 한국사서교육원이 양성한 사서직 인력의 수를 살펴보다도 향후 사서직 인력의 취업에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의 <표 6>에서와 같이 한국사서교육원에서는 1965년부터 1996년까지 27명의 1급 정사서, 1,793명의 2급정사서, 2,653명의 준사서 및 660명의 사서교사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한국사서교육원을 제외하고도 계명대학교에서 사서직 양성을 위한 단기교육과정의 사서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될 미래의 사서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서직을 양성하는 단기교육과정의 중단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57년 기성 현직 도서관원의 재훈련을 위한 특수훈련과정으로 연세대학교에 설치되었던 '한국도서관학당'의 경우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도서관학당의 처음 계획은 학부 졸업생이 배출될 때까지의 4년 간만을 존속시킬 예정이었으나, 그 후에도 사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재훈련을 받지 못한 현직 도서관원이 많이 남아 있어서 도서관계의 요망에 의해 예정보다 10년을 더 연장한 1971년 초에 그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리재철 1994, 665-671).

5. 결 론 및 제 언

우리는 '70년대 후반 학부제와 유사한 계열별 모집을 실시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와

위상이 너무도 많이 흔들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전공학과를 선택할 시점에서 문헌정보학과는 학과의 모집정원을 채우기는커녕 지원자를 거의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을 접한 것도 사실이다. 그 당시 소위 인기가 있는 일부 학과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학과들이 비슷한 결과에 놀란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뚜렷한 철학이나 원칙 없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학문의 구조조정은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의 뿌리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생각일 수 있다. 특히 학문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발상이며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외부환경에 적응하며 모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나가야 한다.

물론 교육부 학술지원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강화된 개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라는 소제목 아래 대학의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스스로 개혁을 추진해야 빛을 낼 수 있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대학의 자발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교육부 학술연구지원국, 1998).

미국에서도 지난 60-70년대 '신좌파'를 중심으로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대학이 교양필수 과목을 없애거나 학과의 통·폐합을 시도했다가 기초학문의 붕괴위기를 자초한 사례가 있다. 그 이후 미국은 다시 기초학문의 체계를 잡느라 고심했는데 우리 나라는 이 같은 교훈을 거의 외면하고 있다. 학문의 과잉투자나 비능률의 문제는 교양 및 전공과목, 그리

고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유기적 연계성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김성복, 1998).

현재 전국적으로 문헌정보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부제가 추진되고 있다. 벌써 일부 대학에서 모집정원의 미달 등과 같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계 인사들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서 및 사서교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그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창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는 학부구성, 전공 이수학점의 조정, 교과목 명칭의 변경 등 모집단위의 광역화로 지칭되는 학부제 전반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시 채널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둘째,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현재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사서 및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충분하고도 다양한 정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기교육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5조와 이와 관련하여 그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별표 3]의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가운데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법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현행 교육법 제79조 제1항에서 [별표 1]의 사서교사의 자격기준 가운데 2번째 항목인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를 삭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셋째, 문헌정보학 관련 각 학회에서는 문헌정보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경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산·학·연 공동연구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1998. 대학 ‘학과 구조조정’ 나섰다, 1월 9일.
- 교육부 제도개선과장. 1998. 전공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운영방안. 『충북대학교 초청 세미나』, 1996년 6월 17일. [청주: 충북대학교].
- 김성복. 1998. 학부제 관련 세미나 자료 『서울대학교 초청 세미나』, 1998년 5월. [서울: 서울대학교].
- 리재철. 1994. 『한국문헌정보학의 문제들』.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 이은철. 1996. 학부제 도입에 따른 문헌정보학 교육의 제문제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1996년 6월 21-22일. [대전: 유성관광호텔].
- 『중앙일보』, 1998. 대학의 고시원화, 5월 19일.
- 최석두. 1996. 학부제에 따른 문헌정보학의 제반 문제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1996년 6월 21-22일. [대전: 유성관광호텔].
- 한국. 교육부. 1999a.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서울] : 교육부
- 한국. 교육부. 1999b. 『99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사업 시행계획』 [서울] : 교육부.
- 한국. 교육부. 1998a. 『98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사업 시행계획』 [서울] : 교육부.
- 한국. 교육부. 1998b. 『98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신청 계획서』. [서울] : 교육부.
- 한국. 교육부. 1997. 『교원자격검정 업무편람』. [서울] : 교육부.
- 한국. 교육부 학술연구지원국. 1998. “고등교육법시행령상의 학사개혁안 추가 설명자료 - 전공이수의 다양화, 모집단위의 광역화 및 학부제를 중심으로” [서울] : 교육부.
- 『한국일보』, 1998a. 학부제 실시 대학 특정전공 편중 심각, 3월 6일.
- 『한국일보』, 1998b. 토론합시다, 5월 5일.
- 『한국일보』, 1998c. 학부제 강제실시는 기초 학문 붕괴 초래, 5월 20일.
- 한상완. 1996. 학부제 실시와 문헌정보학의 진로-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1996년 6월 21-22일. [대전: 유성관광호텔].
- Http://slisanet.skku.ac.kr/~edu/sub1-7.html